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24.5.27. 위촉일 기준

연번	성명	구분	주요 경력
1	김 태 준	위원장	• 現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 前 동덕여자대학교 부총장
2	강 명 속	위 원	• 現 배재대학교 교육연수원장 • 前 한국장학재단·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3	고 혜 원	위 원	• 現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 前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4	김 경 애	위 원	• 現 한국교육개발원 평생·융합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前 삼성꿈장학재단 연구기획담당
5	김 도 기	위 원	• 現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現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6	김 상 호	위 원	• 現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7	김 세 완	위 원	•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8	김 유 열	위 원	• 現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9	김 지 선	위 원	• 現 대전월평초등학교 교사
10	김 태 일	위 원	• 前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前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무위원
11	김 해 관	위 원	• 現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 現 부산예술고등학교 교장
12	김 환 식	위 원	• 現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 •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13	박 소 연	위 원	• 現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 前 분당어린이치과병원 원장
14	이 명 선	위 원	• 現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명예교수 • 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5	이 민 지	위 원	• 現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現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교육국장
16	이 상 립	위 원	• 現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17	이 영 달	위 원	• 現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 원장 • 前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18	이 윤 미	위 원	• 現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前 한국교육사학회 회장
19	이 인 실	위 원	•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 前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20	허 재 준	위 원	• 現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1	홍 인 기	위 원	• 現 고양내유초등학교 교사 • 現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2.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위원들간 논의한 견해를 밝히름

요약

I. 기본 방향

저출생은 교육·노동시장·사회문화 전반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복합 위기이다. 이에 교육정책은 저출생의 원인을 해소하는 변혁적 대책과 교육의 적응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령기 아동에서 중장년까지 생애 전 주기 학습권이 보장되고, 복지·고용·문화·행정 등 타 사회정책들간의 통합적 기획과 더불어 시민사회,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과의 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II. 저출생의 현황과 원인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고령화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원인은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불안정, ② 높은 주거비용, ③ 성차별적 구조와 돌봄 공백, ④ 전통적 가족 규범, ⑤ 과도한 교육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문화적·교육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III. 교육에 미치는 영향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체 교육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은 교육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학생 수는 줄지만 특수교육, 정신건강, 다문화 교육 등 교육 수요는 다양화되며, 통합적 교육복지 체계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대학은 학력주의 약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조정과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기능 재편이 절실하다.

IV. 미래 교육의 도전 과제

미래 역량 격차 해소,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교육 혁신, 역량평가 중심의 대학입시체계 개편, 지역과 연계한 대학 개혁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입시 중심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직업교육, 실무능력, 융합역량 중심의 교육체계 전환이 강조된다.

V. 저출생 추세 반전 내지 완화를 위한 변혁적 대책

첫째, 지식 주입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진로설계 중심의 교육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학습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조기 입직 지원을 통한 생애소득 확대가 필요하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계의 유연화, 선취업-후진학 경로의 제도 강화 등으로 조기 경제활동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영유아 및 초등 교육의 무상화 범위 확대,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된 예체능 활동 지원 등으로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넷째, 인생 N번 시대를 위한 평생학습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일-여가가 분절된 기존의 구조를 넘어서,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유연하고 순환가능한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족, 이웃,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 중심 교육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함양하고, 돌봄과 상호 의존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이민정책의 전환을 통한 고급 인재시장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고급 인재 유치와 이주 배경 아동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and 이민자 대상 교육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

VI. 저출생의 영향에 대한 교육 분야의 적응적 대책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기관의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를 적정화하되, 복합 기능을 갖춘 학교로 재편해야 한다.

둘째, 대학 생태계의 전면적 재구축이 요구된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과 성인, 이주배경 등 다양한 학습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유연화와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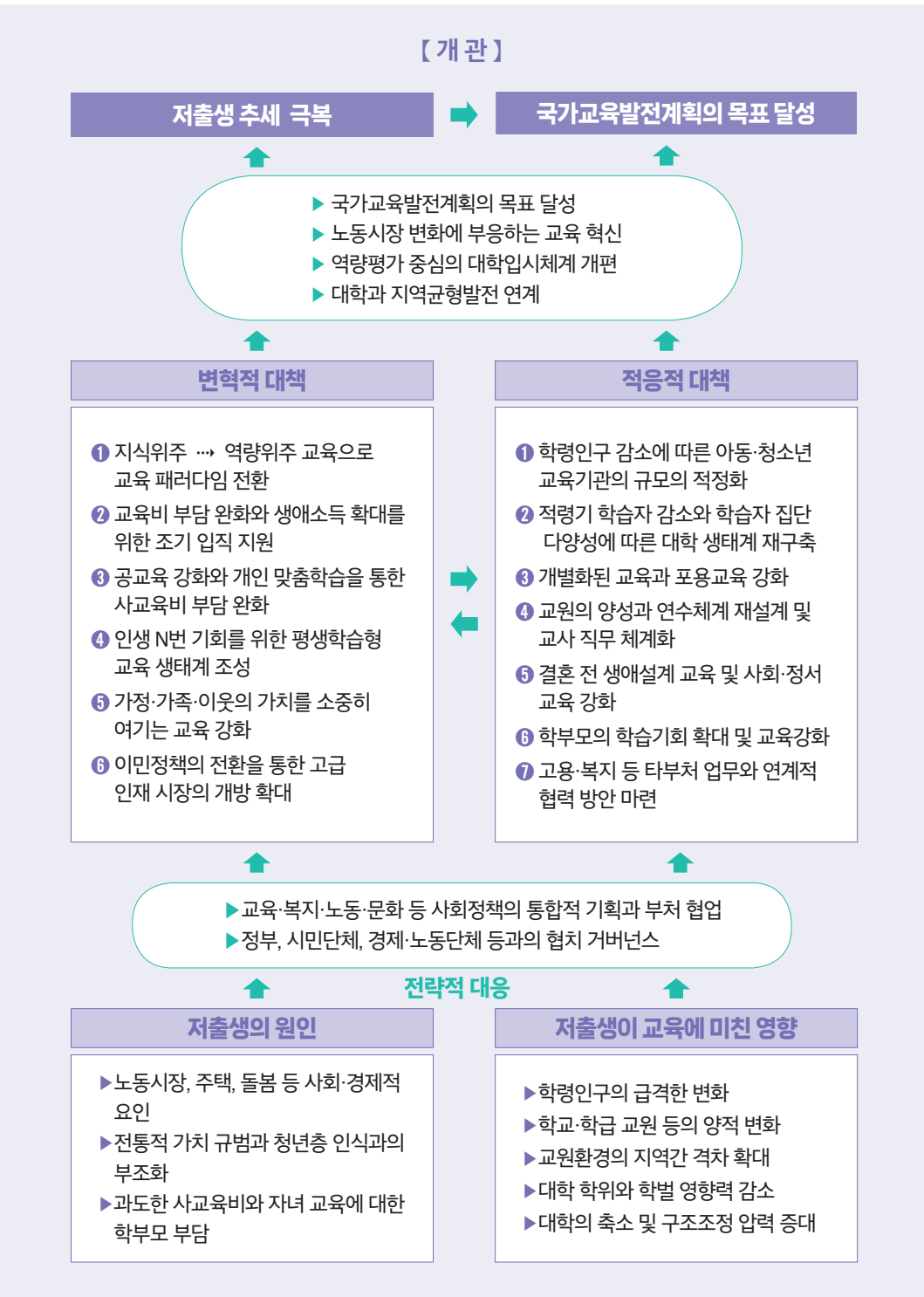
셋째, 개별화된 교육과 포용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습자 배경이 다양해지는 만큼,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지원과 더불어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포용적 학습환경 구축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과 연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교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별 연수와 실천 중심의 전문성 개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결혼 전 생애설계 교육과 사회정서적 역량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 자녀 교육 관련 최신 정보를 학부모가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재정 및 세제, 노동시장, 노인돌봄 등 타 부처(고용, 복지, 재정, 행정 등) 협력 기반의 통합적 교육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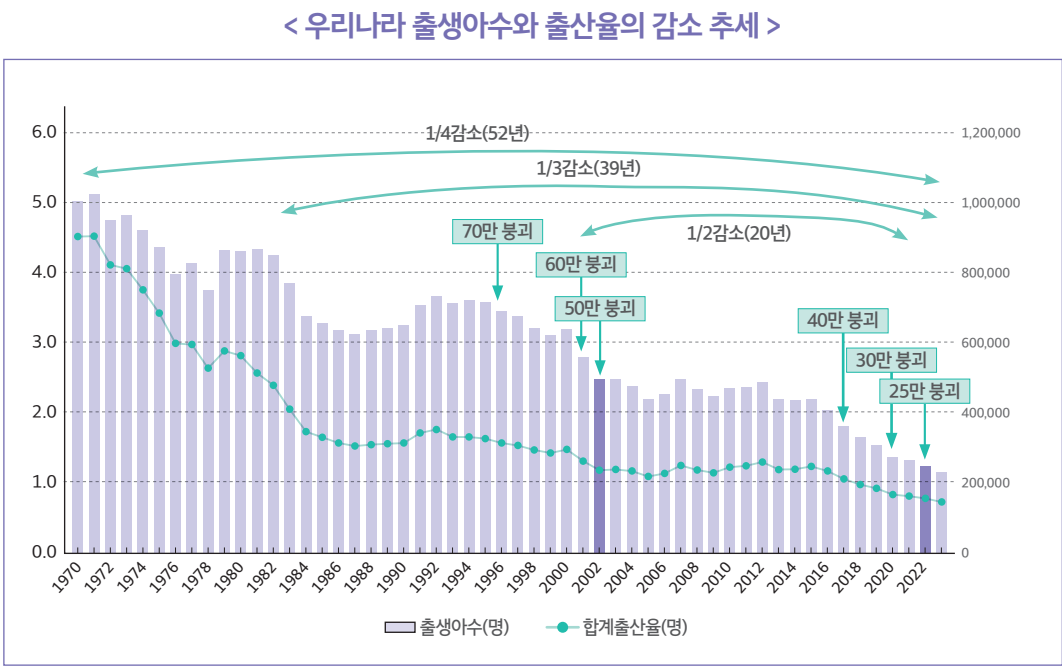
I. 저출생 대책 관련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 미래 인구변화가 초래할 구체적인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변화 추이를 통해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앞으로의 교육 문제는 인구변화 뿐만 아니라 복잡한 갈등 양상을 동반하며,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이 요구됨
 - 이에 따라 교육계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의 갈등 소지를 줄이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이 논의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까지 발전해야 함
- 저출생의 교육 분야 원인을 해소·완화해 나가는 대책과 더불어 저출생이 교육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
 -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추가·보완 또는 상세화가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작성에 기여
 -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 비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제시
 -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 * 이때 역량은 신체적 역량, 정서적 역량,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문화적 역량, 직업적 역량 등을 의미
 - 성인과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a healthy and active life)을 살 수 있고,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 학령기의 학교 교육 정책, 다양한 공간(lifewide) 속에서의 성인학습과 노인학습 정책을 수직적(vertical)으로 연계하되, 수평적(horizontal)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책, 제반 사회서비스(문화·예술·체육 등), 돌봄 등 복지 시스템 등 타(他) 정책과의 조화를 계획 수립의 원칙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사회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으로 교육 대책만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해소 및 개방적 채용 구조, 직무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여성의 고용안정성 문제,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문체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과 더불어 시민사회,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과의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도 장기적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모색 중

II. 저출생의 현황과 원인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 수준으로 OECD 국가 들 평균(2022년 1.51)의 절반 수준임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60여년 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의 위기적 저출산은 2차례의 추세 악화가 있었음. 첫 번째는 2002년부터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되었고, 이후 2016년부터는 출산력 감소가 급격히 심화되었음
 - 2001년과 2002년 출생아 수가 60만 명과 50만 명이 연이어 무너졌는데 이는 19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청년 삶의 불안정성이 혼인과 출산을 미루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이후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던 출산율은 2015년 1.24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8년에는 1.0 밑(0.98)으로 떨어지고, 2023년에는 0.72까지 하락
- 최근 출산율의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코로나 시기 미뤄있던 혼인과 출산의 재개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세반전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임



- 출생아 수는 1970년대 초 100만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는 23만명 수준으로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2000년대 초 위기적 저출산은 청년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출생아 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2016년생 이후 출생 코호트의 규모감소는 매우 심각한데, 이들은 유아돌봄-유치원-초등 저학년 등 차례로 우리사회의 보육과 교육 체계에 커다란 위기로인으로 작용 중이며, 학교와 교육의 위기는 계속해 고학년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 수의 감소는 학교교육의 위기-병력자원의 부족-신규 노동시장 진입 인력감소 등으로 확대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인구규모가 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
- 더불어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 되면서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는데, 이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맞물려 사회갈등의 구조화를 야기할 위험이 높음
 -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의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등 경제적 요인 이상의 사회 체제전환과 사회 연대성의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 증대

※ 참고 통계

< 합계출산율 추이 > (단위 : 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5	2030	2035
합계출산율	1.634	1.480	1.085	1.226	1.239	0.837	0.72	0.65	0.75	0.85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총인구의 추이 > (단위: 천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5	2030	2035
총인구	45,093	47,008	48,185	49,554	51,015	51,836	51,713	51,685	51,306	50,825

출처: 통계청, 2023 한국의 사회지표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 (단위 :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5	2030	2035
고령인구 비율	5.9	7.2	9.1	11.3	13.2	15.7	19.2	20.3	24.3	28.2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중위연령 >

(단위 : 세)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5	2030	2035
중위연령	29.3	30.8	34.8	37.9	40.9	43.7	45.5	46.7	49.7	52.5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

(단위 : 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5	2030	2035
노년부양비	8.3	10.1	12.5	14.8	17.5	21.8	25.8	29.3	38.0	47.7
유소년 부양비	33.0	29.4	26.6	22.0	18.8	16.9	15.6	14.6	12.2	11.7
계	41.3	39.5	39.1	36.8	36.3	38.7	41.4	43.9	50.2	59.4

출처: 통계청 인구상황판

해석과 시사점

- 인구구조의 변화 : 피라미드 → 마름모 → 장독형
- 피라미드 인구구조에 기반을 둔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불가능 : 기업의 인사와 노무관리 혁신, 각종 공적 연금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
- 저출생 대책은 초고령사회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수립
-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합이 2035년에는 무려 60% 가까운 상황에서 증가하는 부담을 개인(가계),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
→ 저출생 극복 위해 유소년 부양비 지원은 강화, 노년은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방향이 요구됨

2 저출생의 원인 분석¹⁾

-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을 야기하는 원인들은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측면 그리고 교육적 측면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요인들은 단순히 청년의 출산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독립, 가족구성, 출산과 양육, 추가 출산 등의 전체적 생애과정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저출산의 발생은 한 두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같은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도 할 수 없음

❖ 사회·경제적 요인

①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일자리를 갖지 못할 경우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혼인의 지연과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의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짐

②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
-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 중 주거비 부담(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출산 및 추가 출산가능성 하락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참고

③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상존

-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고용률, 임금수준, 일자리 질 측면서 ‘노동 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지속
 - 성별 고용률 격차 17.9%p, 출산·양육기(35~39세) 격차 31.2%p(통계청, 2019)
 -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평균 12.9%) 최고 수준 (OECD, 2018)
 -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55.1%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 비율 62% /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비율 73.9% (통계청, 2019)
-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 맞벌이 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아내 181.7분 / 남편 32.2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그 결과, 여성은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 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시, 생계형 일자리로 하향 재취업 경향이 나타남(M자형 곡선 형성)

④ 잔존하는 돌봄 공백

-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이 존재하고, 그 결과,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큼
 - (영유아기: 낮은 공공성)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
 - (초등: 공급 부족)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및 돌봄은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

❖ 문화·가치관적 요인

①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1인가구의 증가와 성인 미혼자녀와의 동거 등의 증가로 연결
- 현행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 규범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 부족

②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 여성 인적자본 수준 증가와 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에 참여하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특히 청년여성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혼, 자녀’에서 ‘노동’ 중심으로 이동
-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 과거에는 대체로 남성은 ‘노동중심’, 여성은 ‘가족중심’으로 생애전망
- 청년은 자신의 노동 생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희망함.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를 선호
 -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51.3%(2015) → 61.4%(2019)
 - 맞벌이 가구 비율 : 44.6%(2013) → 45.5%(2016) → 46.3%(2018)(통계청)
- 하지만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친화적 보수주의’* 등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로 귀결
 - * 일친화적 보수주의(pro-work conservative) :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정하나 돌봄은 여성 몫이라는 규범
- 한편 청년층이 경력·재무·건강·가정 등 생애 주요 결정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학교 교육과 그 이후 과정에서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주어진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 교육적 요인

- 과도한 교육 경쟁으로 인한 높은 사교육비가 저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
 - 2015~2022년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상승에 기인하며 사교육비가 1만원 오르면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유진성,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2.12.19.)
 - 부모가 자녀의 인적자원 수준을 다른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지위 외부효과’가 없을 경우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에서 63%, 부유층에서는 37% 줄고 출산율은 28% 상승하고, 최저소득 그룹의 무자녀 비율은 5.3%에서 0.2%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seongeun kim et al., status externalities in education and low birth rates in korea, aer, 2024.6)
 - 첫째에서 셋째 자녀의 출산까지 주거비 비중은 높은 수준이나 점차 줄어드는 반면 (30.4%→28.7%→25.7%), 사교육비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5.5%→9.1%→14.3%) (박진백, 권진우, 국토Brief 제 947호, 국토연구원, 24.01.03.)

-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조기 부담과 인식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교육 부담과 경쟁이 시작되는데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박 증가로 인해 잘 키우지 못할 바에 아예 낳지 않겠다는 인식으로 출산 자체를 기피
 - 둘째, 셋째 아이로 갈수록 부모의 시간, 비용, 에너지가 분산되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충분한 교육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상존
 - 학벌, 직업, 성취가 아이를 키우는 기준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인식하게 되고, 성공할 수 없다면 출산하지 않겠다고 생각
 - 학교는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평가와 대회를 축소하였지만, 학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확인하고 싶다 보니,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결과적으로 사교육 기반 모의고사·경시대회·레벨테스트 등에 의존

해석과 시사점

- 실업과 취업난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교육 강화, 빠른 입직 지원
- 막대한 (사)교육비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입시 중심의 교육 경쟁 시스템 → 입시 부담 완화 및 평생 학습형 교육 시스템 구축
- 막대한 양육비 → 국가 지원 돌봄 시스템 강화
- 가치관 변화 → 가정과 결혼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교육 강화

참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진단한 저출생 원인

- 가족 형성 지연 추세 고착화
 - 만혼과 비혼 증가
 - (초혼 연령) '91년 27.9세(남), 24.8세(여) → '21년 33.4세(남), 31.1세(여)
 - (30대 미혼 비중) '90년 9.5%(남), 4.1%(여) → '20년 50.8%(남), 33.6%(여)
 - 기혼 가정의 출산율도 하락
-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하는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
 -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 결혼 등 제도의 경직성, 유교 문화적 유산 등
 - 초(超) 경쟁적인 사회 환경으로 결혼·출산보다 생존을 더 중요하게 인식
 - 경제 여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
 -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

출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자료(2023년 3월 28일)

Ⅲ. 저출생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1 학령인구의 급격한 변화 초래

- 학령인구도 저출생 추세에 따라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
 -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원아와 초등학생 수 감소는 현재 진행 중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순차적으로 문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
 - 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폭이 잠시 줄어드나, 2030년대에는 급격한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유아교육 원아 수의 추이 >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계	
	원아 수	감소 규모 및 비율 (2015년 기준)	원아 수	감소 규모 및 비율 (2015년 기준)	원아 수	감소 규모 및 비율 (2015년 기준)
2015	682,553	2023년 -160,759 -23.6%	1,400,456	2023년 -388,643 -27.8%	2,083,009	2023년 -549,420 -26.4%
2020	612,538		1,244,396		1,856,934	
2023	521,794		1,011,813		1,533,607	

주: 교육부의 '2024교육기본 통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를 토대로 작성

< 출생자 수 비교 >

2001~2003년 출생자 수				2021~2023년 출생자 수				비고(감소)
2001	2002	2003	계 (2006년 유아교육 대상 자 수 추정)	2021	2022	2023 (잠정)	계 (2026년 유 아교육 대상 자 수 추정)	2006년 대비 2026년 -957,186 -56.4%
640,089	559,934	496,911	1,696,934	260,562	249,186	230,000	739,748	

주: 통계청 2023년 출생 통계를 토대로 작성

<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2025	2030	2035
초등학교(6-12)	3,901	4,073	4,018	3,280	2,720	2,724	2,607	2,344	1,607	1,366
중학교(13-15)	2,443	1,869	2,064	1,985	1,578	1,364	1,364	1,403	1,154	771
고등학교(16-18)	2,349	2,166	1,841	2,084	1,868	1,390	1,364	1,367	1,326	954
대학교(19-21)	3,225	3,275	2,596	2,601	2,755	2,410	1,967	1,865	1,879	1,727
계	11,918	11,383	10,519	9,950	8,920	7,888	7,302	6,978	5,967	4,819

출처: 통계청 인구상황판

- 2022년 기준, 이주 배경 인구 중 학령인구(6~21세)는 약 33만 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약 4.5%를 차지. 2042년에는 이주 배경 학령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학령인구의 약 1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24년, 202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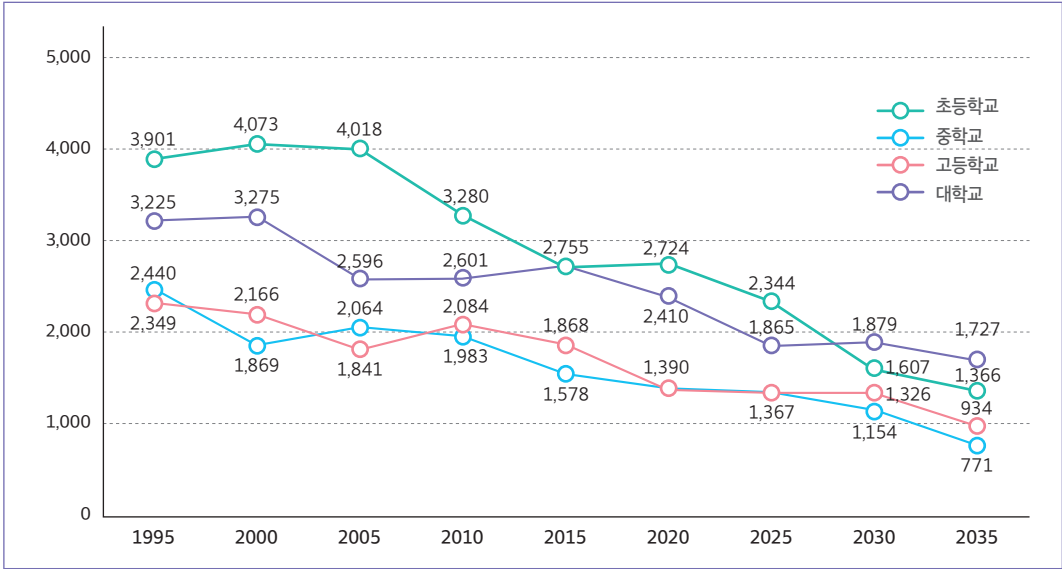
< 학령인구의 감소 변화 폭 >

구분	학령인구 수(단위: 천 명)					2000년 기준 감소 폭(%)			
	2000	2010	2020	2030	2035	2010	2020	2030	2035
초등학교(6-12)	4,073	3,280	2,724	1,607	1,366	-19.5	-33.1	-60.5	-66.5
중학교(13-15)	1,869	1,985	1,364	1,154	771	+6.2	-27.0	-38.3	-58.7
고등학교(16-18)	2,166	2,084	1,390	1,326	934	-3.8	-35.8	-38.8	-56.0
대학교(19-21)	3,275	2,601	2,410	1,879	1,727	-20.6	-26.4	-42.6	-47.3
계	11,383	9,950	7,888	5,967	4,819	-12.6	-30.7	-47.6	-57.7

출처: 통계청 인구상황판

< 학령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학생 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원도 급증
-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조산 및 다태아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

< 특수교육의 추이 >

구분	2002년	2024년	증감
특수학교 수	136교	195교	+ 59교 (+43.4%)
특수학급 수	3,953개	13,931개	+ 9,978개 (+252.4%)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54,732명('00년)	115,610명	+ 60,878명 (+111.2%)
특수교육 교원 수	8,201명('00년)	27,001명	+ 18,800명 (+229.2%)

출처: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2024년 특수교육통계

-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 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 증가, 자살 학생 수의 증가 등 학교의 생활문화와 학생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
 - 국립정신건강센터(2024)의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에 따르면 전체 소아·청소년의 16.1%가 생애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하였고,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상황
 - 2024년 교육부가 필요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수의 비율이 2.1%(초등학교 4.2%로 가장 높은 상황)
 - 2021년 기준 0~17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통계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2')
 -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 시도자 등 18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의 14.0%. 이유는 주로 정신적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보건복지부의 '2023 자살실태조사')

해석과 시사점

-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 감소 폭이 작으나, 30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므로 순차적 대응이 필요
- 대학교는 중·고등학교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이미 2차례('00~'05, '15~'25) 급격한 감소를 겪은 바 있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양적·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
- 학생 수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은 늘어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증가하며, 정신건강의 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
- 이주 배경을 가진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학교 교육과 학교 공동체의 다문화 수용 능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
-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학교의 생활문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2 학교·학급·교원 등의 양적 변화 발생

- 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학교·학급·교원 등은 대부분 증가. 다만, 이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 억제,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생 수 감소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
-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중등 직업교육 참여 학생도 급감('00년 약 82만 2,000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수의 36.1%, 2023년은 약 189,650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수 1,278,269명의 약 14.8%)

< 학교 수 추이 > (단위: 개)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초+중+고)
1995년	8,960	5,772	2,474	1,830	10,076
2000년	8,494	5,267	2,731	1,957	9,955
2005년	8,275	5,646	2,935	2,095	10,676
2010년	8,388	5,854	3,130	2,253	11,237
2015년	8,930	5,978	3,204	2,344	11,526
2020년	8,705	6,120	3,233	2,367	11,720
2023년	8,441	6,175	3,265	2,379	11,819
2024년	8,294	6,183	3,272	2,380	11,835
차이(95→24년)	-666	411	798	550	1,759
	-7.4%	7.1%	32.3%	30.1%	17.5%

출처: 교육개발원,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24

< 학급 수 추이 > (단위: 개)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초+중+고)
1995년	14,473	107,183	51,523	45,003	203,709
2000년	20,723	112,437	48,946	48,544	209,927
2005년	22,409	126,326	56,968	53,924	237,218
2010년	25,670	123,933	58,373	58,172	240,478
2015년	34,075	120,063	54,855	59,668	234,586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초+중+고)
2020년	36,634	123,517	52,195	56,243	231,955
2023년	32,472	125,803	53,915	55,817	235,535
2024년	31,713	124,796	54,331	55,846	234,973
차이(95→24년)	17,240	17,613	2,808	10,843	31,264
	119.1%	16.4%	5.4%	24.1%	15.3%

출처: 교육통계 서비스, 유·초·중등 교육통계 전체 현황

< 교원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995년	교원 수	25,576	138,369	99,931	99,067	362,943
	교원 1인당 학생 수	20.7	28.2	24.8	21.8	
	기간제 교원 비율	-	0.3	2.6	1.3	
2000년	교원 수	28,012	140,000	92,589	104,351	364,952
	교원 1인당 학생 수	19.5	28.7	20.1	19.9	
	기간제 교원 비율	-	6.0	3.4	2.8	
2005년	교원 수	31,033	160,143	103,835	116,411	411,422
	교원 1인당 학생 수	17.5	25.1	19.4	15.1	
	기간제 교원 비율	-	1.2	4.7	5.6	
2010년	교원 수	36,461	176,754	108,781	126,423	448,419
	교원 1인당 학생 수	14.8	18.7	18.2	15.5	
	기간제 교원 비율	-	2.9	8.4	8.4	
2015년	교원 수	50,998	182,658	111,247	134,999	479,902
	교원 1인당 학생 수	13.4	14.9	14.3	13.2	
	기간제 교원 비율	-	3.5	14.4	14.5	
2020년	교원 수	53,651	189,286	111,894	132,104	486,935
	교원 1인당 학생 수	11.4	14.2	11.8	10.1	
	기간제 교원 비율	-	4.5	16.7	17.8	
2023년	교원 수	55,637	195,087	114,800	130,610	496,134
	교원 1인당 학생 수	9.4	13.3	11.6	9.8	
	기간제 교원 비율	-	6.7	20.3	22.5	
	교원 증가율(95년 대비)	117.5%	41.0%	14.9%	31.8%	36.7%

출처: 교육개발원,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 교육기본통계

주1. 교원 수에는 정규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강사 및 퇴직 교원은 제외됨(단, 휴직 교원은 포함됨)
주2: 교원 증가율은 2019년 교원을 기준으로 2023년 교원의 증가를 표시한 숫자임

※ 비교 통계(「OECD 교육지표 2024」 기준)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2년 기준) >

(단위: 명)

구분	우리나라			OECD 평균		
	초	중	고	초	중	고
학생 수	15.8	13.1	10.5	14.0	12.8	12.7

주 1. OECD 기준 상 '교사'는 기간제 교사 및 휴직 교사를 포함한 수업 교사(수석 교사, 보직 교사, 실기 교사 등)를 대상으로 산출(관리직 교원,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는 제외)

주 2. 핀란드(13명, 9명, 17명), 미국(14명, 15명, 15명)

< 평균 학급 수와 평균 학생(원아) 수 >

(단위: 개, 명)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유치원	평균 학급 수	2.7	3.1	3.8	4.2	3.8
	평균 원아 수	65.5	64.2	76.4	70.4	61.8
	급당 원아 수	24.3	20.7	20.1	16.8	16.3
초등학교	평균 학급 수	22.4	21.2	20.1	20.2	20.4
	평균 학생 수	712.5	583.6	454.1	440.1	421.7
	급당 학생 수	31.8	27.5	22.6	21.8	20.7
중학교	평균 학급 수	19.4	18.6	17.1	16.2	16.5
	평균 학생 수	685.1	630.9	495.0	408.3	406.4
	급당 학생 수	19.4	18.6	17.1	16.2	16.5
고등학교	평균 학급 수	25.7	25.8	25.5	24.1	23.5
	평균 학생 수	841.5	871.0	762.9	565.0	537.3
	급당 학생 수	32.7	33.8	29.9	23.4	22.9

출처: 교육개발원.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

주: 급당 학생(원아) 수는 평균 학생(원아) 수를 평균 학급 수로 나눠서 나온 숫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22년 기준): 우리나라(22.0명, 26.0명), OECD 평균(20.6명, 22.8명)
- 주요 국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22년 기준): 호주(23명, 20명), 핀란드(19명, 19명), 일본(27명, 32명), 영국(26명, 24명), 미국(20명, 21명)

해석과 시사점

- 학생 수의 감소를 분교장의 축소로 일부 대응하였으나 학교 수는 증가. 이는 폐교는 쉽지 않지만, 인구 증가 지역의 학교 신설은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
- 학급 수 역시 증가(특히,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밀학급 감소 정책의 결과로 추정
- 교원 수도 증가, 상당수는 기간제 교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대폭 감소
- 1교당 평균 학급 수는 약간 감소(유치원 제외), 1교당 평균 학생(원아) 수는 유치원은 약간 감소, 다른 학교급은 상당한 감소. 급당 학생(원아) 수도 상당히 감소
- 대부분 지표가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한 상황. 이는 학급 개설, 교사 총원 등과 같은 기존 방식 사용이 앞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해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근본적 의문. 적정 학교(학급, 학생 수 등) 논의가 필요
- 동시에 학교 기능과 역할, 학생 구성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구축도 동시에 고민해야 함(정신건강, 특수교육, 직업교육 등)

3 교육환경의 지역간 격차 확대

- 인구변동은 지역 간 인구격차를 통해 교육환경의 격차를 확대
 -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공공교육의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20년 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의 75%를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학령인구 감소를 극단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임
 - 이로 인해 공공육아 및 초등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중등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교육 체계도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임
 -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지역 돌봄체계가 붕괴되고 있음
 - (예) 부산 영도구, 중구 등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인구가 크게 줄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 유치원이 없는 지역이 나타남
 -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아동 성장에 필수적인 놀이터와 같은 인프라 또한 사라지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지방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체계의 붕괴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의 기초발달, 사회성 형성 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이러한 인구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인구위기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외에도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 교육 수준의 저하, 지역 빈곤화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쇠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4 대학 학위와 학벌의 영향력 감소

- 현재 노동시장의 격차는 학벌주의와 사교육 과잉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앞으로 노동시장은 산업 간 격차, 즉 혁신·신산업과 전통 제조업 간, 해외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생산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준비하는 역할은 점차 약화될 것임
- 이로 인해 대학 학위와 학벌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우리사회는 점차 개개인이 갖춘 기술과 역량을 더 평가하는 사회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5 대학의 축소 및 구조조정 추진 압력 증대

- 2009년 이후 2024년까지 15년째 사실상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요인으로 등장
 -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진단 결과, 14개 사립대학이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 (2024.12.12.)
- 대학의 축소 및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대학 폐쇄로 인한 지역발전 생태계의 극심한 혼란 발생이 예상됨
- 대학교 학령인구가 비교적 완만하게 줄어드는 2030년대 중반까지가 대학 구조조정의 마지막 시기임
 -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학과 지역발전 생태계의 급속한 붕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

IV. 미래 교육의 도전 과제

1 미래역량 격차 축소

-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역 격차 악화는 학력 격차를 넘어 미래 대응 역량 격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대도시에서는 사회변화와 기술변화를 쉽게 체험할 기회가 많지만,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그러한 기회가 제한적임
 - 이에 따라 지방 학생들은 미래 기술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이러한 자원을 지역 격차 문제에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함
- 또한 지방 지역의 양적 축소가 질적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2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 추진

- 현재 교육 체계는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역량의 강화 책임을 대학에 거의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나 과학기술 변화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대학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은 점차 제한되고 있음
- 따라서 대학 이전 단계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대학이 제공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 특히 대학교육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및 지식 공급 체계가 필요함
-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 체계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
 -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다음 세대의 미래대응 역량을 크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지방 선도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이 맡아야 할 역할은 매우 큼. 그러나 현재의 교육은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지방자치 행정체계와의 협업, 교과수업을 넘어선 직업기술교육 등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학교 외부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해야 함

3 역량평가 중심으로의 대학 입시체계의 개편

- 현행 수능 중심의 입시체계는 인구감소와 과학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미래에 유효한 전략인지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
- 현재의 입시체계의 기본적 성격은 성적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배제하는 방식임
 - 이는 학령인구가 충분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지만,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된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없음
 - 향후 대학 입시의 주도권은 대학 자체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대학이 각 학과와 학교에 적합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며, 입시의 과정 및 관리에 대해서 대학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초적 학력을 제공하고, 개별 학생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평가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

4 대학 개혁과 지역균형발전간의 연계 강화

-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 입시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대대적인 축소와 구조조정이 필요
 - 지방대학의 정리를 포함하여 지역의 학령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축소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이는 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대학 내 학과 수를 축소하고 전반적인 규모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대학의 축소와 조정 과정에서 지방대학은 지역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함
 - 지방대학은 지역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의 R&D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와 교육의 상호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 대학, 지방정부,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V. 저출생 추세 반전 내지 완화를 위한 변혁적 대책²⁾

- 교육 분야에 있어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불안³⁾과 “잘 키우지 못할 바에야 낳지 않는다”는 “완벽한 부모 증후군”이 배경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불안의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내부 승진 중심의 폐쇄적 노동시장(closed labour market), 학연(學緣)·혈연·지연(地緣) 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네트워크 의존 사회, 관료직 일자리의 부족 등이 겹쳐 좋은 대학의 입학이 그 이후의 삶을 좌우한다는 확고한 사회적 인식 등이 자리잡고 있음
- 따라서, 한 번 낙오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의 배경이 되는 ‘단일 구조형 교육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경로설계의 다양화를 통해 ‘사다리형’이 아니라 ‘그물망형’의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1 지식위주 교육에서 역량 위주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 저출생 시대의 교육 개혁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함.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매개체로서, 전통적인 교육의 목표가 지식과 기술 전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학습자에게 인간의 존엄성, 다양성의 포용, 그리고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투입·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가 바탕이 된 역량위주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

❖ 진로 경로 설계 지원과 역량교육체제로 개편

- 평생에 걸쳐서 진로 경로를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로 전환
 - 특화된 진로지도 및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설계를 지원
- 학교급별 진로교육 초점 차별화
 - 초중학교는 학습설계 중심의 진로교육으로 전환
 - 고등학교는 학습설계와 경력설계를 병행한 진로교육으로 전환
 - 대학에서는 진로지도와 다양한 학습설계(learning design)를 지원하는 퍼실레이팅 시스템 마련

2) 본 장에서 제시된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과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함.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 3차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 참고

- 학문분류에 기반한 전통적 교과 체계에서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체계를 마련하고, 이 체계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
 - 국가 차원의 역량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 등을 모색
 -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든 아동·청소년이 길러야 할 공통역량을 정하고, 이를 모든 학교급, 관련 교과를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역량개발체계를 만들며, 이를 학교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체계를 마련
 - 또한 다양한 시공간에서, 다양한 주체(심지어는 physical AI)와 함께,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을 위한 역량, 사회적 역량(사회력 포함), 시민적 역량(권리와 의무, 책임의 조화를 포함), 문화적 역량, 직업적 역량(노동윤리 포함) 등도 포함
- 내신과 학생부도 학습과정과 성취 내용을 기록하고 기대 역량을 추론할 수 있도록 개편(예: 디지털 배지, NFT 기술 활용 등)
- 다양한 교육 수요와 미래수종산업에 필요한 역량위주 교육과정 운영 체계 마련
 -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특색있고 높은 교육수준의 중고등학교를 육성, on-off hybrid 교육과정, 거점학교 중심의 hub-and-spoke model,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역 대학과 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 역량교육을 통해 고급/중급/ 저급 인력 양성체계 구축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역량 개발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 구축 시 세계 동향과 국제적 수준을 반영

❖ 역량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평가제도를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 학생 모두를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도록 개성, 적성, 강점을 발굴하는 평가로 전환
 - 평가 본연의 역할을 학생 개개인의 강점, 개성, 잠재성 특이성, 적성을 찾아서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전환
 - 주관식, 서술식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고,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
 - * 예: 문항 개발자, 통계 전문가, 채점 전문가 등
 - 칭찬과 격려의 문화 조성
- 성인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도 구축
 - 이를 통해서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 기회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

❖ **지산학협동을 바탕으로 역량위주의 교육과정 개설**

- 산업체 또는 기업의 요구를 대학의 프로젝트(또는 해결 과제) 수업으로 연계하고 학점(2~12 학점 내외) 부여
 - 수업은 교수와 산업체(기업) 관계자가 공동으로 관리
 -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 개발 지원도 포함하고, 인문·사회나 예·체능 분야 산업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예를 들면, Animation 회사의 Character Design 작업을 대학 수업과 연계하여, 기업은 인력과 개발 시간을 줄이고 학생은 실무능력을 배양

- 학교가 창업캠퍼스, 인적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임팩트 캠퍼스가 되도록 노력
 - 스타트업(start-up)을 시작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의 ‘K-Startup 창업 지원 시스템’과 연계
 -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가 스타트업 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엑셀러레이터의 실태를 조사, 개선책 마련

- IT기술로 무장하고 1~3개의 전공에 특화하며 전통적인 캠퍼스를 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까이 가는 교육을 강조하는 혁신특화 기업대학인 니오부티크대학(NBU: neo-boutique university)의 설립도 검토 (조동성, 국가교육위원회 발표자료, 2024.11)

❖ **학교 교육과정에 창업역량(entrepreneurship) 교육을 강화**

- 초·중학교의 사회(특히, 경제) 교과에서 창업관련 내용 요소를 강화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창업역량’ 교과를 일반선택으로 추가하되, 기존의 교양교과군에서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은 공통과목으로 개편(단, ‘진로와 직업’ 내용에 창업과 창직(創職) 관련 내용을 포함)
- 교육과정에 발명과 지식재산권 교육을 반영
 - 초·중학교: 과학 교과에서 내용 요소로 반영
 - 고등학교: 교양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발명과 지식재산권’을 추가하고, ‘진로와 직업’ → ‘창업역량’ → ‘발명과 지식재산권’으로 연결되는 학습경로(learning pathway)를 마련
 - 각종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취득 기회도 확대
- 모든 대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 교양교육에 창업역량, 발명과 지식재산권 교육을 반영하도록 유도(단, 무전공이나 융합 전공 학생은 교양 필수)
 - 구체적 방법론은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하여 결정

- 기업은 학교들과 협력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자율적 학습시간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인정도서가 선택과목으로 채택되도록 노력

2 교육비 부담 완화와 생애소득 확대를 위한 조기 입직(入職) 지원⁴⁾

❖ **중등 직업교육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등 이후 직업교육과의 연계를 강화**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일반고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직업교육을 경험하는 방안을 마련
 - 직업교육을 3년의 수학 기간에 얹매이지 않도록 하고,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연계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격의 노동시장과 교육계에서의 통용성을 보장
 - 일반고 직업과정 학생들이 진로역량과 학습역량 그리고 직업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소통, 연결 기회를 확대하는 사다리형이 아닌 그물망형의 교육체계 강화
 - 고교 진학 후에 진로 변경 기회 확대
- 중등 이후의 직업교육훈련과 수직적 연계를 강화
 - 직업교육 이수자의 다양한 삶의 경로(교육과 일의 순환 또는 병행)를 반영할 수 있는 학습 경로(learning pathway)를 설계

❖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 등의 선취업 시스템을 활성화**

-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으로 가능한 직무와 직업을 지속 발굴하고, 취업과 연계
-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우선하고 학생의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 병행
- 직업계 고등학생 졸업생들이 일정기간 취업 후에는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 진학 시 특례혜택 부여 확대
 - 현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참여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강화 및 온라인 강좌 확대
- 입직 시 학력을 차별하는 노동시장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와 문화를 개선

4) 첫 직장 입직 연령이 1세 낮아지면 첫 아이 출산확률은 1.9%p 상승하고, 입직 당시 급여 수준이 100만 원 상승하는 경우 첫 아이 출산확률은 2.7%p 상승(국회예산정책처, ‘청년층 취업과 저출산의 관계’, 2019.11.)

❖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perception)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직업교육 이수자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기관이나 부처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생애 차원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유용성을 홍보
 -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으로 불리는 고등단계의 직업교육도 포함해서 직업교육의 가치를 홍보

❖ **수학(修學)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수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
 - * 방안(예): 고교-전문대 통합과정, 학·석사 통합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월반(越班), 직업교육의 경우 성취 목표 조기 달성을 통한 조기 졸업, 선행학습경험평가인정제(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정착 등
- 4년제 대학에서도 2년, 3년만에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공을 바꾸어 편입해도 2년만에 졸업할 가능성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

3 **공교육 강화와 개인 맞춤형 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 영유아 및 초등학교 단계의 질 높은 무상교육 범위 확장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
 -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무상의 범위에 포함할지를 신중하게 검토 추진
- 학제 개편과 함께 연계해서 유아교육의 일부 기간을 의무 교육화하는 방안 논의
-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장 마련
 - 사교육비 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과목은 영어이며, ‘2024년 EF 영어 능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간 영어 능력 격차가 30점 이상 벌어져 교육자원의 불균형이 도드라지고 있음
 - 네덜란드의 공립학교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TTO(tweetalig onderwijs) 참고

❖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개인별 맞춤학습 강화**

- AI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 및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양방향 AI 교육 튜터 시스템 구축

- 경쟁력 있는 EBS 수업 활성화
-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제공 예) Singapore Student Learning Space(SLS)

❖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예·체능 교육 시스템의 구축**

- 사회체육,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의 결합·연계 모델을 개발
 -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체육활동은 사회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 지역사회시설을 아침과 저녁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주간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연하게 운영
 - 사회체육에서의 클럽활동과 연계된 전문적 운동선수 양성 시스템을 구축
- 예술교육도 지역의 시설과 인적자원을 학교의 예술교육과 결합·연계 강화
 - 개인별 사사(師事) 정보는 대외적 공개를 추진
- 남녀 학생의 상대 성별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성에 대한 이해 및 성교육 모델 운영

4 **인생 N번 기회를 위한 평생 학습형 교육 생태계 조성**

❖ **학습 시스템의 재설계**

- 공부(학교)-일(노동시장)-여가(은퇴 후)의 구분을 전제로 한 교육·학습 시스템을 학교-일-여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 모색
 -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 교육에 치중된 공교육 시스템을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확장해서 성인 교육을 보충적 학습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성인 교육,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정년 등을 통해 제3의 삶을 살아야 하는 노령층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확대
 - * 평생학습 3단계: 아동·청소년 교육(first phase of education), 성인 교육(second phase of education), 노령층 교육(third phase of education)
 - 성인과 노령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학습결과를 누적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경력개발 경로를 계획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계좌’에 고등학교 학습 이수 기록(학점제 관련 과목 중심) 연계를 신중히 검토하고, 계좌에 수록된 학습결과의 자격제도로의 연계 및 평생학습 설계 등 학습결과 활용을 더욱 강화

-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은행제와의 연계도 추진하여 평생학습에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적 고리를 마련

❖ 5060 세대의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5060세대의 경제활동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시스템 구축
 - 2040세대와의 일자리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있는 세대 공존형 일자리를 찾고, 이들 일자리에 맞는 능력개발을 지원

❖ 국가역량체계 확대 및 평생학습을 위한 학제 재설계 검토

- 학습자의 평생학습경로를 지원하는 국가자격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로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의 실질적 활용 확대를 위해서 개별 자격의 활용체계와의 정합성 강화 및 운용기준 마련
 - UNESCO ISCED(국제교육표준분류)의 수준 체계를 고려하여 개발하되, 역량수준을 나타내는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가 자격 수준의 핵심이 되도록 설계
 - 이러한 틀 내에서 mirco degree, partial qualification, RPL(선행학습경험평가인정제), Credit Banking System,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등의 자격관련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는 틀을 마련
 - 또한, 평생학습자의 학습 설계(learning design)와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을 지원하는 진로지도와 상담, 학습지원 체제도 연계
- 국가자격체계(NQF)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학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학제를 재설계하는 방안 검토
 - 의무교육으로서의 유아학교 도입, 입학 학기 조정, 학교별 수학 연한 등의 방법 외에도 학제를 학습제도(學習制度)로 보고 유·초·중등교육을 몇 개의 학습 단계로 재구조화^{*}하는 방법도 검토

^{*} 예)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1~2학년을 학습 1단계(first phase of learning), 초등학교 3~6학년을 학습 2단계,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학습 3단계, 선택교과 중심인 고등학교 2~3학년을 학습 4단계로 설정

5 가정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 강화

❖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연계성 강화

-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용과 활동 요소를 구성하고,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 예) 멘토링, 방과 후 프로그램, Parent-Teacher Learning Communities, Open School Day,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학습, 각종 봉사활동(양로원, 아동양육시설 방문과 봉사 등), 부모 교육 워크숍 등

❖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 강화

- 국교위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OTT, 각종 방송 프로그램, SNS 활용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 활성화

6 이민정책의 전환을 통한 고급 인재 시장의 개방 확대

- 저고위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 수록된 ‘외국인력 등 이민정책 전환 검토’ 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인재 확보를 위한 추가 과제 검토
 - 귀국 희망 우수 인재들의 국내 안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우리나라에 유학한 외국 유학생 중 우수한 자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정착 방안을 폭넓게 검토
 -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근로자의 역차별 문제 해결 방안과 기술 유출 방지 방안도 아울러 강구

참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생애 주기별 대책 외의 대책 일부 (편집 및 발췌)

- **공동체 가치 및 인구교육 확산**
 -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넛지(nudge)식 대국민 홍보 강화, 다양한 매체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공동체 가치 및 인구교육 확산
 - * (학교교육 반영) 생명·가족·공동체·성평등 가치 함양(초등교육), 인구구조 변화(중·고등교육)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 **외국인력 등 이민정책 전환 검토**
 - 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②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③ 추가 검토(노동시장 분석, 국내 거주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역량 강화, 우수 전문인력 확보·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 정책, 이민성 신설과 함께 체계적인 외국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 **고령자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중장년 전직·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 활용이 가능한 영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속 발굴, 노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장기근속 유도
 -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아이돌봄 등 돌봄과 연계한 일자리, 한국가스공안전공사 (취약계층 가스안전점검) 등 공공기관 협업 일자리 등
-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대응**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수도권 집중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규제체계 재점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

출처: 저출생·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년 6월 19일)

VI. 저출생의 영향에 대한 교육 분야의 적응적 대책⁵⁾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적정 규모화

❖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적정 규모화 추진

- 유·보 통합의 틀 속에서 적정 규모에 대한 심층 방안을 연구를 토대로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당 적정 원아 규모, 학급 규모(급당 적정 원아 수 포함), 교사 규모 등을 분석, 추계
- 돌봄과 유아교육에 있어 공공 책임을 늘리는 방안 모색(예: 사립 운영을 공립에 위탁 관리 하거나 국가에 매각 등)
 - 최근 10년 간 유치원·어린이집의 폐원, 휴원, 매각, 합병, 위탁 등 다양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
 - 사립과 공립의 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존중하되, 원아의 입장에서 모두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마을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돌봄과 유아교육 방식의 다양화 추진(예: 부산교육청의 보살핌 늘봄)

❖ 초·중등학교의 적정 규모화 및 질적 변화 추진

- 학교급별로 적정 규모*의 학교에 대한 모델링
 - 목전에 놓인 초등학교의 적정 규모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되, 순차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적정 규모화 방안도 마련
 - * 학급 수 조정, 급당 학생 수 조정, 학교급 간 연계 등
 - *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
 - *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정 교직원 수에 대한 재개념화와 교직원의 역할 재정의도 중요(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양성 과정 통합 등 교사 양성 체제 개편도 함께 검토)
- 지역별·학교급별 적정 규모 학교를 바탕으로 과대·소규모 학교의 재개편 모색
 -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의 적극적 연계와 통폐합(예: 유·초 결합형,

5) 저출생 추세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적응시키는 대책을 의미하며, 본 장에서 제시된 각각의 방안에는 별도의 분석과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함.

초·중등 결합형, 유·초·중등 결합형 등) 및 현장 상황에 맞는 창의적 학교 유형 설계 운영을 추진(예: 클러스터, 교실학교, 거점학교 등)

- 유희교실 혹은 폐교 발생시 지역사회 평생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복합시설로의 활용을 적극 추진 (시·도청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 최근 10년 간 학교 폐교, 학교 통폐합에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조사하여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의 순응(compliance)과 지지(su-pport)를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
- 소규모 학교로서 성공적 학교 운영을 해온 사례도 조사하고 확산 방안도 마련
- 국교위나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서벽지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매뉴얼을 개발
- 학교 재배치나 통폐합 등에 따른 교통 대책, 기숙 시설, 다양한 시설(예: 과학실습실, 예술 활동실 등의 특별교실) 확보 등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나아가 학교가 학생의 오감을 깨우치도록 바꾸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
- 적정 규모 추진과 함께 바람직한 미래형 초·중등학교 모델 제시
- 학교 단위별 교육 목표, 교직원의 역할 변화, 학교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반영

참고 1 **적정규모 학교 정책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최근 사례(24. 11. 24. 굿모닝 충청)**

- 적정규모와 통폐합 방식 등에 대해선 교육감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일부 교육청은 관련 조례 있음), 지역의 반발로 학교의 통폐합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특히 학교 폐지는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
- 참고로 충남의 경우 당초 1면 1교를 추진했으나, 1면(읍) 2교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중

참고 2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 계획(24.11.11, 파이낸셜 뉴스)**

- ① **거점형(Center):**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의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
 - 인구 소멸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거점 학교를 지정해 인근 소규모 초등학교의 여러곳의 고학년 학생들이 통학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교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분교로 활용
 - 소규모 학교 여러 곳을 묶어 공동 학군으로 지정하고, 학군별로 인근 거점학교의 교육시설을 공유
- ② **개편형(Create):** 향후 학교 수 감소로 시·군을 넘나들며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고 기숙형 학교로 개편

- ③ **통합형(Combine):** 인접한 초·중·고교를 합친 통합 운영학교를 마련하고 폐교 부지에는 특목고, 대안학교, 온라인 학교 등 여러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 통합 운영학교에서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급별로 다른 건물을 사용하며 체육시설 등을 공유
- ④ **복합형(Complex):** 폐교 부지를 공유학교, 늘봄학교 등으로 활용하거나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조정
- ⑤ **확장형(Connect):** 각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기존 폐교 부지를 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

2 **학습자 감소와 학습자 집단 다양화에 따른 대학 생태계 재구축**

❖ 합의에 기반한 대학의 축소균형 추진

- 입시연령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하여 대학 위기의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시기별 대응 로드맵을 수립
- 전국 대학 입학정원을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서 감축하는 방안 검토
 - 대학 자율적으로 숙의(熟議) 과정을 통해 대학 사회의 합의가 되도록 지원
 - 정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의 수입 감소를 일정 기간 보전하고, 그 기간 동안 대학은 자체적인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추진
 - * RISE사업과 글로벌 사업도 이와 연동해서 추진
 - 대학유형을 기술전문대학, 교육중심대학 그리고 연구중심대학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 틀 내에서 세분화된 대학 유형을 재검토
-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슈들을 포함한 대학 규제와 구조개혁을 재설계
 - 사립대학의 자발적 폐교, 국·공립대학의 통·폐합 등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학생과 교직원 대책*임을 상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
 - *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학교로의 편입 외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
 - (예:심리 상담과 학습 코칭, 원격 대학의 교육과정을 계속 이수토록 지원 등)
 - * 직원의 재취업을 지원(고용보험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통합적 활용하고, 교수는 최고의 지식인 그룹임을 존중해 이들의 교육과 연구를 일정기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학령기 학생의 학위취득제도가 아닌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제도로서의 학점은행제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방안 마련

❖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다양화**

- OECD 1인당 평균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으로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목적세로 고등교육세목 신설 및 교육재정을 재구조화하고 정부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
- 고용보험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학 교육의 직업능력개발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일반회계 예산과 통합·연계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을 마련

❖ **대학의 학사 구조 개편 및 대학 선발의 다양성 확대**

- 무전공 입학제 및 자율 전공제를 확대하되, 대학생의 역량 향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 등 학업 계획에 대한 상담 등 지원 시스템 구축
- micro credential과 digital badge의 통용성 확대를 포함한 학위(자격)제도의 개편도 검토
- 편입학 제도의 확대 및 경로 다양화
- 기회균형 특별전형제도의 일종인 저소득층의 정원외 선발 확대 및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 선발제’와 유사한 방안 검토
- 세 자녀 이상 출생 시 세 번째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 및 등록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 부여

❖ **지역을 살리는 지방대학을 육성**

- 지역 살리기와 대학 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지방 명품대학 확충
 - 수도권외의 주요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에 과학특성화대학과 같은 형태로 인문, 사회, 공학 등의 분야에서 지역에 특성화된 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육성
 - * 대학을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개편하는 계획 전제
 - * 기존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 및 개선
- 학문이나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이들 거점대학과 협력 대학 간의 프로그램 공동 운영과 공동 학위제를 운영 즉 일종의 hub & spoke 방식 추진
- 현재의 지방종합대학을 자율적으로 지방특성에 걸맞는 지방 단과대학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 검토
- 대학의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기능을 저출생과 지역 학생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 RISE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 강화하고, 지방 정착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사회의 책무성을 부여

* 대학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문화·예술·체육·복지 활동 및 지역 학교 교육 지원 등을 대학의 기본 역할로 하는 내용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

- 질 관리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학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 외국인 학생을 지속적 유치하고 한국어 교육 및 직장문화 교육 심화를 통해 일자리로의 연계 강화
 - 지역사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 근로자와 그 가정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국어 교육 포함)하고, 이 교육을 받는 외국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인문학, 직업능력, 사회봉사,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대학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로 육성
 - 각종 행정기관(지방 포함)이 대학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각종 HRD(직업능력개발 훈련 포함)를 대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

3 개별화된 교육과 포용교육의 강화

- 축소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역량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각자의 역량을 생애 전반에 걸쳐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체계가 요구되며 현재와 같은 성적 중심의 수월성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음
- 강점 기반 개별화 교육 계획을 마련해서 전 생애에 걸쳐 추진
 - 학습자의 강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동기 부여 및 개별적 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계획의 유형, 강도, 기간 등을 결정할 때도 중요한 자원이 됨
 - 경로설계의 다양화를 통한 ‘그물망형’ 교육체계로의 전환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에 투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 때 가능함
- 전체 학생 수는 줄어 들지만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양상의 학생들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지능적 장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그리고 성격적 장애를 가진 경계성 장애 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특수교육의 역량을 높이고, 공교육이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해야 함

- 또한 경계성 장애 학생들을 포함한 특수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
- 중도 입국 외국인 자녀의 한글 교육과 교과교육 지원 시스템 강화
 - AI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한국 학생과의 공존과 협력의 학습 문화도 개발
 - 상담과 진로지도 시스템도 구축
- 중도 입국 외국인 중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화
 - 한글 교육, 한국 교육제도, 학교에의 참여 등의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
 -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해소를 지원할 상담 체제 강화

4 교원의 양성과 연수체계 재설계 및 교사 직무 체계화

❖ 교원의 역량 체계 개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교원 제도 개편

- 교사가 갖춰야 할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해 교사 양성과 연수 체계를 재설계
 - 양성 과정에서 길러야 할 역량, 교사 직무수행과 연수를 통해서 길러야 할 역량을 내용별, 수준별로 정리

* 예) 교육과정 관련 역량(수업, 평가 포함), 행정 역량, 학생과 학부모 관련 역량, 지역사회 관련 역량 등
-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자격제도도 개편(교과목 교사와 비(非)교과목 교사, 1급과 2급 정교사, 수석교사, 담임교사 등의 관계를 정리)

❖ 역량체계와 교사 자격제도를 바탕으로 교사의 다양한 직무를 분석하고 체계화

- 학급의 생활문화와 학습문화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학급 담임교사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고 체계화(예: 교육과 생활지도 담당, 학부모와 학생 상담, 학교와 학급 운영 담당 등)
 - 교사의 처우 개선도 연계하여 검토(적정 수업시간 수, 교사의 연구 시간 보장, 교사 급여체계 개편 등 포함)
 - 교사 지원 인력, 행정인력 등의 체계화도 함께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
- 교사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교사들의 재교육 및 전환교육과 직군 이동을 활성화(예: 초등학교원이 상담교사 교육을 받아 초등학교에서의 상담 활동)

5 결혼 전 생애 설계 교육 및 사회·정서교육 강화

- 가치관과 인생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가족관 형성과 생애 설계 역량 배양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
 - 사회·도덕·보건 등 각각의 교과목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가족 및 생애설계’라는 이름으로 범교과주제로 새롭게 포함하거나 신규 교과로 개발
 -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인 이행기 진입을 위한 교육을 대학과 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 교사 양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 교육과 연계하여 가족 및 생애 설계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방안도 마련
- 사회·정서교육(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에서 심리 상담과 정서 상담 교육을 강화
- 미성년자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을 지도
 - 스마트폰과 SNS 등 디지털 기기의 자율적 사용과 책임 있는 사용의 적절한 조화를 중시하도록 지도

*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률을 제정, 프랑스는 3~15세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해서 UNESCO(2021)의 ‘인공지능과 교육: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 등을 참조

국외사례

- ① (일본) ‘가정과’ 교육과정을 통해 중고등학생에게 가족의 가치와 생애설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관에 점진적 변화
- ② (싱가포르) 국가 차원의 ‘가족교육 프로그램(Family Education Program)’을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운영
- ③ (프랑스)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인구변화와 세대 간 연대 교육을 실시
- ④ (독일) ‘미래 가족 프로젝트(Future Family Project)’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가족 유형과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교육
- ⑤ (스웨덴) 학교 교육과정에 ‘생애설계와 가족(Life Planning and Family)’ 프로그램을 필수과목으로 도입

6 학부모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교육 강화

- 학부모들에게 변화된 교육환경과 가족 구성, 변화된 학교 교육, 자녀의 성장과 발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특히, 다문화 감수성 교육)

- 아동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위한 적절한 학습의 정도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교육(무분별한 선행학습과 과도한 조기 교육의 부작용도 포함)
-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정과 학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 참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교육 등 각종 정부의 지원 정책을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여 정보 부족과 왜곡된 정보로 인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완화
- 학부모의 학습기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기업들의 협조가 요망됨

7 고용·복지 등 타 부처업무와 연계적 협력 방안 마련

- 산학협력이나 창업교육 등에 산업계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세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일부 임금 보조, 주거 대책 등도 아울러 고민할 필요
- 노동시장을 직무와 역량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개편
 -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인센티브 정책 강화가 필요함
- 노동시장에서 다양하고 유연화된 근로 체계가 만들어지고, 휴가제도의 양적·질적 개선 (특히, 재직자가 휴가자의 몫까지 떠맡지 않아도 되는 인력구조를 설계)
- 지역사회(보건복지부 담당)와 어린이집·유치원(교육부)으로 구분된 영·유아 돌봄 기능의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돌봄과의 결합·연계 모델도 개발

[참고]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개요

1. 위원 구성

(’24.5.27. 위촉일 기준)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주요 경력
1	위원장	김태준	남	• 現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 前 동덕여자대학교 부총장
2	위 원	강명숙	여	• 現 배재대학교 교육연구부장 • 前 한국장학재단·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3	위 원	고혜원	여	• 現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 前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4	위 원	김경애	여	• 現 한국교육개발원 평생·융합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前 삼성꿈장학재단 연구기획담당
5	위 원	김도기	남	• 現 한국의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現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6	위 원	김상호	남	• 現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7	위 원	김세완	남	•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8	위 원	김유열	남	• 現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9	위 원	김지선	여	• 現 대전월평초등학교 교사
10	위 원	김태일	남	• 前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前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무위원
11	위 원	김해관	남	• 現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 現 부산예술고등학교 교장
12	위 원	김환식	남	• 現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총장 •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13	위 원	박소연	여	• 現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 前 분당여린이치과병원 원장
14	위 원	이명선	여	• 現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명예교수 • 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5	위 원	이민지	여	• 現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現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교육국장
16	위 원	이상림	남	• 現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17	위 원	이영달	남	• 現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 원장 • 前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18	위 원	이윤미	여	• 現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前 한국교육사학회 회장
19	위 원	이인실	여	•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 前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20	위 원	허재준	남	• 現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1	위 원	홍인기	남	• 現 고양내유초등학교 교사 • 現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2. 주요 활동

회차	일시	장소	안건(내용)
1차	‘24.6.27.	국교위 대회의실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검토과제 논의
2차	‘24.7.17.	국교위 대회의실	• (발제) 저출생 현황·요인 및 예상되는 사회·경제구조 변화 전망(이상림 위원) • (발제) 통계로 살펴본 학생 수 감소 위기(홍인기 위원)
3차	‘24.8.7.	국교위 대회의실	• (발제) 저출생 현상에 대응한 교육정책 해외 사례 연구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 • (발제) 일자리 분포의 지역격차와 청년 수도권 집중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저출산 시대 여성 경제활동의 중요성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4차	‘24.9.4.	국교위 대회의실	• (발제) 저출생과 한국 교육제도의 변화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 • (발제) 한국사회 저출산, 가족, 인구변화 (이상수 이화여대 교수)
5차	‘24.10.2.	국교위 대회의실	• (발제) 저출생 인구위기를 기회로 : 청년세대 현실과 정책 전략 (손윤희 前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 (발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공교육시스템 혁신에 대한 시론적 주장 (김환식 위원)
6차	‘24.10.16.	국교위 대회의실	• (발제)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방향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교조개혁 전망(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7차	‘24.10.30.	서대문구회의실	• (발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KEDI 이진권 박사) • (발제) 위원별 저출생에 대응한 교육개혁 과제 정책제안 발제
8차	‘24.12.4.	한반도미래인구 연구원	• (발제) 저출생 시대 교육시스템 개선 방안(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논의) 저출생 시대에 대응한 교육개혁 과제 정책제안 논의
9차	‘25.1.15.	국교위 대회의실	• (발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과장) • (발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입시제도 간소화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강명규 前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위 위원)
10차	‘25.2.19.	국교위 대회의실	• (발제) 저출생 시대, 교육 해법은 창의교육 : Why&How? (성은현 호서대학교 부총장) • (발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 새로운 교육 : 최고의 나를 만나는 학교 (강정하 코코랩 역량진단연구소 소장)
11차	‘25.3.19.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 (발제) 저출생 시대의 맞춤형 교육혁신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이영달 위원) • (발제) 근무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변연배 딜리버리N 대표)
12차	‘25.4.16.	자본시장 연구원	• (발제)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각(김환식 위원) • (논의) 저출생 특위 최종보고서 관련 논의 및 토론
13차	‘25.5.21.	국교위 대회의실	• (논의) 저출생 특위 최종보고서 관련 논의 및 토론